

“野 폭주 맞선 것” 내란도 야당 탓... 억지 담화로 자기 변론

탄핵·특검법 발의·예산 삭감 등 이유 내세워 야권 반국가세력 규정 부정선거 등 보수 유튜브 주장 강조...“의원 체포” 증언 등 해명 안해

尹 담화 무슨 내용 담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사태'와 관련,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의 배경으로 야권의 무리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중국과 북한의 첩보 활동에 따른 위급 상황을 지적하며 '반공(反共)' 이데올로기까지 꺼내들었다.

무엇보다도 "국회 문을 열고 끌어내라"는 등의 계엄군 간부들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국회 계엄군 투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부 증언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부정선거 등 일부 보수 유튜브들의 편협한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담화 내용에도 담아 계엄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평가다. 이미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사실상 계엄

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변호를 하기 위한 담화였다는 점에서. 특히 자신의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해 극우 보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탄핵과 특검법·예산 삭감 따른 계엄, 내란 아니다”=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유가 분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향후 탄핵과 수사에 대비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유로 178회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 공직자 탄핵 추진 등을 지시했고 이를 야권의 비위를 달기 위한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제21조 1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 야권의 27번의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이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면서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안·특검법 발의 등 의정활동을 사회 전복을 위한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또 예산안 삭감 등 국회의 역할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별비, 금융사기 사건·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대공 수사·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서 야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차세대 원전 개발, 기초과학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동해 가스전 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계엄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치와 소통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야당의 반발

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계엄 책임 언급 없고, 일부 증언도 부인=이날 윤 대통령의 국민 담화에서는 국회에서 증언된 각종 계엄 관련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일부 증언과 위배되는 발언도 많았다.

특히 '느슨한 계엄'으로 '계엄 효과'를 얻고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것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조차 저의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군 간부들과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위배된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광종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분회회장의 국회의원들을 깎아내려'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국회의원을 분회회장 밖으로 깎아내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

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면서 앞서 밝혀진 증언과 정반대 발언을 내놓았다.

◇극우 유튜브 주장도 계엄 사유=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등을 실제 믿고 있는 듯한 말들도 쏟아냈다.

이날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공격을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점검을 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실제 대통령이 믿고 있었고, 군인을 선관위에 출동시켜 조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도 일고 있다.

또 계엄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위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내란 자백”... 野 “극단적 망상”

여야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 대통령계가 분열 양상을 보였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기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이인영 의원),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정태호 의원), "극우 유튜브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장경태 의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갈증'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이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명구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졌고,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발언을 중단하고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잠답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 “나는 잠시 멈추지만 혁신당은 전진”

대법,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조국혁신당 조국(59)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 당 대표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대법관 엄성필)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관리방사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또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